

민주노동당 총선평가와 향후 과제

이재영

민주노동당 정책팀장

당선을 꿈꾸지 않는 선거 참여가 있을까마는, 한국의 민주진보운동은 으레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한다거나 '대중투쟁의 계기'로 삼겠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들먹이곤 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형식적 절차인 선거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기백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속내로는 애초에 이길 가능성이 없는 현실을 자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선거를 선전선동과 대중투쟁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은 민주진보운동의 기본일 뿐이며, 선거를 통해 취할 진짜 목적은 당선과 권력 획득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참여하였다. 따라서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고, 당이 등록 취소된 현실을 '실패' 아닌 다른 것인 양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1. 두 가지 다른 모습

필자는 87년 이후 민주진보운동의 이름으로 치루어진 대부분의 선거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왔다. 선거를 마친 지금 찬찬히 뒤돌아보면 민주노동당의 16대 총선은 이전 선거들과는 확연히 다른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었다.

첫째, 처음으로 개표 방송을 진지하게 지켜보았다는 점이다. 사실 이전의 선거에서는 개표 방송을 지켜봐야 할 이유가 없었다. 당선을 목표로 하지도 않았고, 당선권에 근접하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4월 13일 밤부터 4월 14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에 마음을 졸이며 TV를 지켜본 사람은 당원들만이 아닐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전빈련 등 기층대중조직의 조직적 지원을 등에 업고 있었고, 온 국민의 여망인 정치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주체였다.

캠페이커라는 김윤환과 대통령을 목표 삼는 전직 총리 이수성마저 떨어지는 지역주의 미친 바람 속에서 이제 갓 태어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최용규 두 후보는 막판까지 접전을 벌여 정치평론가들을 놀라게 했다. 나아가 민주노동당은 과거 가장 주목할만한 진보정당이었던 민중당이 얻었던 평균득표율 6.4%의 두 배인 13.1%를 모아냈으며, 단 21곳의 선거구에서 97년 대선 때 전국에서 모인 표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¹⁾

둘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거 후 양상에도 주목해야 한다. 정당에게 선거 패

배는 빛 잔치, 조직 이완 같은 선거 후유증을 의미한다. 2석을 얻은 민주당조차 당이 해산되느니 마느니 하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개표 이후 민주노동당에는 격려와 위로의 전화가 쇄도하고, 기존 당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입 당원의 입당이 증가하고 있으며, 패배 과정에서야 민주노동당을 알게 된 일반 국민의 성금이 담지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평당원의 비자발성과 국민 인지도에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원내 교두보 확보 실패라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원과 국민들은 오히려 선거 결과에서 '현실에서의 가능성'과 '미래의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승리21〉이 선거 후 해산되지 않고 재기에 성공한 최초의 진보 정치조직이었다면, 민주노동당은 선거를 획기적 성장의 계기로 삼는 최초의 진보 정치조직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2. 실패의 원인들

민주노동당의 실패 원인으로 지역주의 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강

1) 14대(1992년) 민중당과 16대(2000년) 민주노동당의 득표 비교

	14대 민중당	16대 민주노동당
출마 지역	51개 지역	21개 지역
전국 득표	30만 8천 표 (1.5%)	223,261표 (1.2%)
출마 지역 평균 득표율	6.45%	13.1%
10%~19.9% 득표지역구	5개 선거구	4개 선거구
20% 이상 득표 지역구	3개 선거구	4개 선거구

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민주노동당은 지역주의를 예견하고 선거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실패 원인은 내부에서 찾아져야 한다.

첫째, 선거 참여의 사회경제적 목적인 신자유주의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IMF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총선이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적 국가 정책을 논박하고 저지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16대 총선을 97년 이후 방어와 후퇴만을 거듭해온 민주진보 진영이 전선을 반전시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계기로 조장코자 했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단체는 납세/병역과 같은 신상 정보에 집중하였고, 결국 16대 총선은 어떤 정치적 논쟁도 없는, 지난 수십년 동안 가장 퇴행적인 선거가 되고 말았다(필자가 준비한 10여 편의 TV 토론 중 절반 가량이 집권 여당의 거부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우리 사회의 연로를 장악하고 있는 기독교층이 일치단결하여 이념과 정책을 금기시하고, 민주노동당은 선거전이 가속화될수록 국민들에게서 잊혀져 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재정과 인력의 측면에서 정책과 이슈를 개발하고 그를 전파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정도의 득표가 나온 것만도 놀랄만한 일이다.

둘째, 중앙당의 전략적인 실천이 부족하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지구당의 노력이 선거전의 승패를 좌우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우리 나라의 선거는 언제나 중앙당이 어떤 언행을 펼치는지, 그에 대해 국민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그나마 취약한 중앙 인력을 지방으로 파견하며 중앙당의 역할을 스스로 제한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당은 뭔가 해야 한다는 체무의식, 지역 후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느끼면서도 사업의 기획과 집행은 커녕 전화받기에도 급급한 개점휴업 상태로 빠져 들고 말았다. 주먹구구식 선거운동과 뚝뚝 파는 것을 당에 대한 최고의 충성으로 여기는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하지 않고는 민주노동당에게 미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3. 민주주의는 뜨거운 감자인가

울산 북구에서 불거진 당내 반목을 빼놓고 이번 선거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울산 북구는 인구구성상(사회통계학적 구성)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60~70%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선거구이다. 그럼에도 경선 과정에서 시작되어 선거전 내내 계속된 그룹 간의 분열은 민주노동당의 등록 취소로 귀결되었다. 민주노동당 당원과 당내 의견그룹들이 당 민주주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약간의 문제를 제기해 보자.

첫째, 당선 가능성이 선거의 중요한 기준일 수는 있지만, 그에 관련해 민주주의가 논해져서는 안된다. 당 중앙위원회가

최용규 후보를 인준한 것을 두고 '노동대중의 정서' 등을 논거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보정당의 민주주의는 미국식 경선 제도(Primary)처럼 '자임하는 민중'이 아니라, 참여함으로써 권리를 확보하는 '활동 당원'에 철저히 근거한다.

둘째, 당의 민주주의는 당헌과 강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점에서 당의 강령을 위배하지도 않은 이상범 후보를 비방하거나, 공존 정선에 입각한 당헌을 위협할 정도로 반목을 일으키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셋째, 민주노동당은 창준위 발족 때부터 보수정당이나 어러져러한 사회단체들은 시도하지도 않는, 선거에 의한 선출과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을 실천해 왔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넘는 내용과 결과에서의 민주주의로 접근해 가고 있으며, 이른바 울산 북구 '사태'는 당 민주주의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다. 따라서 당내 질서의 혼란을 특정 세력의 음모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거나, 필수적 절차를 민주주의의 충족으로 평가하는 양 편향 모두가 극복되어야 한다.

울산 북구 '사태'에서 비롯된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은 민주주의를 당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뜨거운 감자'로 인식하는 태도들이다. 민주노동당의 민주주의가 민주노동당처럼 취약한 신생정당에게는 대단히 버거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불균등 발전은 스스로 편하할

문제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내세워야 할 덕목임이 분명하다. 다수의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은 최용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월등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당 민주주의를 훼손치 않겠다는 역사적 선언을 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일시적으로 더디고 단기적으로 손실을 자초하겠지만) 궁극적 승리는 민주주의에 의해서만 달성된다는 정신에 입각해 창당하였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4. 정당명부제가 있었다면

민주노동당의 13% 평균득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실현되었을 경우 최대 35석, 일본식 정당명부제가 실현되었을 경우 최대 6석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다. 지금에 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향후로도 민주노동당의 향배와 한국 정치의 개혁에는 정당명부제만한 화두가 있을 수 없다.

안타까운 점은 정당명부제 도입 등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을 부르주아 정치제도 안의 무의미한 시도로 치부하는 그릇된 시각이다. 몇몇 단체와 급진적 학자 중 일부는 제도적 개선 노력을 의회주의나 개량주의라 비판하며, 이른바 '현장정치'를 실패한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개념 규정도 돼 있지 않고, 매번 전투적 경제주의로 메몰되고 마는 '현장정치'는 진보정당운동과 민주노동운동에

있어 극복 대상일지언정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한 사회의 계급적 성격은 모든 제도와 관행에 녹아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계급적 성격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정치제도, 선거제도이다. 노동계급의 진출과 보통선거권의 쟁취, 피선거권을 둘러싼 각 계급의 치열한 투쟁, 세계 진보정당의 성장에서 정당명부제가 한 역할 등 역사적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완고한 지역 거점에 기반하는 한국의 반동적 정치체제를 혁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정당명부제 이외의 것에서 찾을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전국구 의석 배분으로 확대하는 현행 전국구 제도와 돈 없는 사람들의 참정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기탁금 제도 등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나아가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무권리 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정치제도 개혁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기성 보수정치권의 정치 독점에 도전하는 두 흐름이 존재하였다. 언론의 각광을 받은 총선연대의 실험은 권력의 문제를 전적으로 기성 정치권 안의 인적 교체에 맡겨 두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도전이라 평가할 수 없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 특히 민

주노동당은 정치 권력을 분점하여 사회 변혁을 도모코자 한 점에서 총선연대와 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언론 역시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출구조사 오보가 나오자 마자, 중앙당사는 '역사적 도전'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오보는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더욱 뜨거운 눈물을 강요하였다. 개표 직후 '당의 유지 발전'을 천명한 민주노동당이 또 다시 지지자들의 눈물을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많은 산맥을 넘는 험로가 남겨져 있다.

먼저 민주노동당은 진짜 당다위적이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는 아직도 '정치세력화'라는 당위에 쫓겨 달려온 노조와 재야단체의 잔재, 비정치적 사고와 '당적'이지 않은 활동방식들이 많이 남아 있다. 당원과 각 단위가 단련된 정치부대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어느 노조, 어느 단체 소속원임을 내세우기 전에 당원임을 자랑스러워하는 당적 기풍이 진작되어야 한다.

수권을 향한 전략과 외연 확대에도 시급히 착수하여야 한다. 주어진 일정도 쫓기 어려운 실정도 무시할 수 없지만, 당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누구와 연대하고, 국민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집권에 이를 것인지 주도면밀한 계획을 마련하고 과감히 실천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국민에게 환영받는 민주노동당의 승리를 이룰 것이다. ❖